

“새만금 해수유통량 확대에 긍정적 작용”

한정에 환경부장관 후보자, 오늘 열릴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의원 ‘새만금수질개선 방안’ 서면질의에

20일 개최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과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의 서면질의에 대해, 한정에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량 확대결정이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에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올 상반기 마련될 예정인 후속수질대책 세부이행계획에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준병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한정은 “지

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량 확대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용수 공급대안·후속 수질관리대책 등이 마련되면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새만금호 관리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명확한 사업들은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새만금유역 수질악화의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농업비점 및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수질대책

에 7가지 핵심 고려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한 후보자는 “상류 유역 하수처리시설 및 호내 오염처리시설 투자 지속, 기존 계획된 호내시설 공사 진행 담보 등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후속 수질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위원회와 관계기관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밝힌 7가지 핵심 고려사항은 ▲새만금 유역에 연결된 상류하천 용량 확보 ▲동진강과 만경강 하수처리시설 투자 담보 ▲기존 계획된 호내 시설 공사 진행 담보 ▲호내 오염처리 시설 투자 지속 ▲호내 물의 순환시스템 마련 ▲인근 어민들의 어촌 활동 제약 최소화 ▲물의 순환을 위한 갑문 개설 시 조력발전 검토 등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발언권 신청하는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가능’

도교육청, 대정부 건의안에

교육공무직임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근무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으로서 그 업무 역시 폭넓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 치료비 지급(학교안전공제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밝힌 것이



전국적인 기준과 지원 마련 등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학교안전법상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비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과 중복하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비롯해 11개 시·도 공제회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피공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회의 의장 “도내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책 마련 나설 것”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급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급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에게 “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전북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며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위기극복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차노조 임원진은 “최근 5년간 생산량과 수출물량 급감으로, 지역상

용차산업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라며 “지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의장은 “상용차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중앙정치권과 정부, 관계기관에 알리고, 상용차산업 체질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개최하는 제378회 임시회에서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혁신성장산업육성 주요 업무 계획

미래먹거리 준비·신산업 기반 마련

전북도 혁신성장산업육성은 19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정책목표와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성장산업육성은 4대 정책목표로 ▲미래먹거리 준비 및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기반 마련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 육성 ▲탄소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형 그린뉴딜 선도 등을 설정했다.

또한, 혁신성장산업육성은 ▲혁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R&D생태계 강화 ▲홀로그래프산업 육성, 혁신도시 신지역성장 거점화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 조성 ▲조선생태계 복원과 뿌리·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등 8대 핵심과제의 세부실행과제도 제시했다.

▲미래먹거리 준비 및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기반 마련
대형 혁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확대(1→20건 이상)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122개사) 지속 추진과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으로 신기술 적용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 신사업 발굴을 통한 특구 추가지정 및 사업화를 추진(특장차, 재생에너지 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통합(One-Roof) 서비스 강화 및 테크비즈니스센터의 차질 없는 완공(올해 4월)으로 R&D허브를 구축해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20→23개) 및 기술사업화·역량강화에 지원(24개)한다.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전기차 클러스터 유망기 개발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올해 7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 육성
중전·중소 전기차 협업센터 조성

(2024년까지 330억원) 등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명신 등 5개 기업)를 구축,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해갈 계획이다.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구축사업(2026년까지 5,000억원) 등을 통해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조선산업 신생태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최대 20건 이상으로 확대
규제 신사업 발굴 통한 특구 추가 지정도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대 생산기지로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성 기회로 연관 기업유치 유도 데이터산업 육성 등 통한 ICT산업 기반 마련키로
새만금 클러스터 성장 견인 산·학·연 집적화 기반 마련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성을 기회로 연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유도 및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한 ICT산업 기반(2025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내년부터 2025년까지 1,200억원)을 통해 뿌리·기계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 융합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로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착을 지원(올해 310억원)해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

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산 탄소소재를 응용한 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수소용기 분야(수소저장용기 및 고속유인딩 기술개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150억원)를 탄소융합재의 신시장으로 삼아 탄소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자립화(2025년까지 199억원), 고도화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올해 90억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노·바이오분야 및 화장품산업 분야(올해까지 25억원)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형 그린뉴딜 선도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그린성장을 주도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핵심기반 구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과제기회를 통해 새만금 클러스터 성장을 견인할 산·학·연 집적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산업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집적화해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대응과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홀로그래프 분야 기술개발 등 D.N.A.기반 산업융합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가 선점한 3대 재생에너지 분야와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 전주기 지원 등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시·도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두세훈 도의원 “자치경찰관 임용권, 일부만 위임...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지난해 12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자치경찰관 임용권이 일부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유원추천위원회는 시·도 지소실장과 시·군·구의회의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려 있어 자치경찰의 편향성에 빠질 위험이 있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원주2,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경찰사무가 국가·자치사무로 분리되고, 동시에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자치경찰관의 감과 경위로의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있고, 그 외의 임용권 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돼 자치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제의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 된다”며 “전북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 등 자치경찰제 관련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치안에 대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9일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라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됐다.

강동화 의장은 “전주시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선봉에 설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